

# 충청남도 녹색일자리 진단

- 성장 중심 일자리 너머  
지역을 돌보는 일자리로 전환 필요 -

박은영 |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 발행일

2023년 6월 30일

▶ 발행처

사단법인 녹색전환연구소

▶ 연구자

박은영(대전충남녹색연합)

※ 본 보고서는 녹색전환연구소가 수행하는 녹색일자리 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구자가 보고서를 통해 서술한 내용은 녹색전환연구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보고서는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며 상업적·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인용 시 출처를 명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명기 예: 박은영, 2023, 「충청남도 녹색일자리 진단 - 성장 중심 일자리 너머 지역을 돌보는 일자리로 전환 필요」, 녹색전환연구소 발간

# 목차

01 충청남도 일자리와 녹색일자리 .....	5
1. 일자리 현황 .....	5
가. 민선 8기 일자리 계획 .....	5
나. 일자리 쟁점 사항 .....	7
2. 녹색일자리 현황 .....	11
가. 민선 8기 일자리 계획 중 녹색일자리 계획 .....	11
나. 녹색일자리 관련 언론 검색 결과 .....	15
3. 녹색일자리 사례 및 쟁점 사항 .....	18
02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	22
1. 에너지전환 현황 .....	22
가. 갈등 사례 .....	22
나. 주요 정책 .....	24
2. 주거와 이동 .....	25
가. 주거 관련 지역 현안 .....	25
나. 이동 관련 지역 현안 .....	28
참고문헌 .....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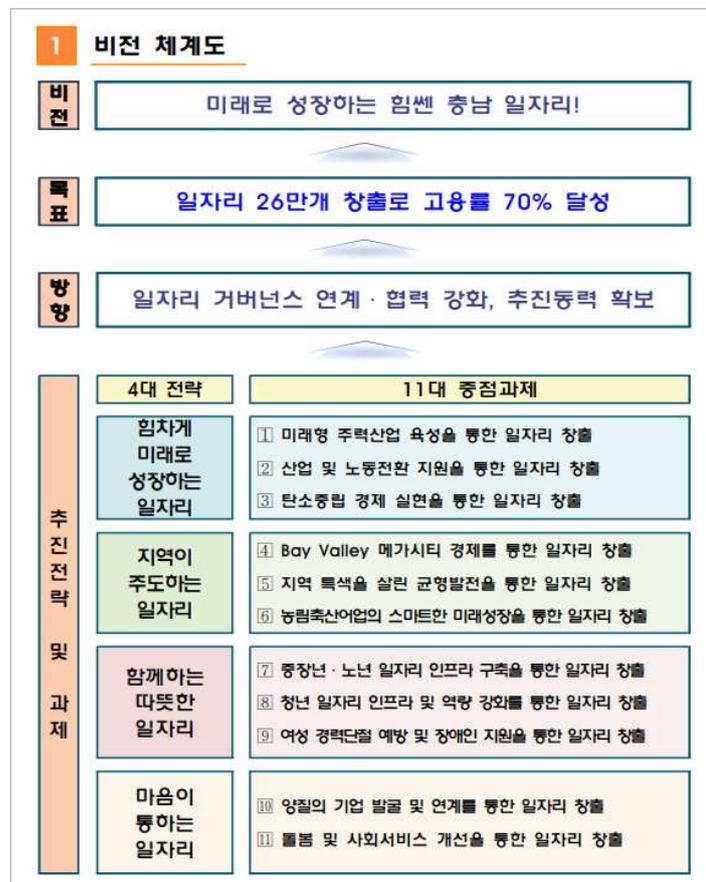


# 01 충청남도 일자리와 녹색일자리

## 1. 일자리 현황

### 가. 민선 8기 일자리 계획

충청남도 일자리 전략은 산업,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성장’, ‘발전’을 상징하는 ‘힘센’이라는 단어를 비전에 넣어 산업육성과 물적, 인적 인프라 구성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기후위기 대응 차원이 아니라 신산업 미래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어 대부분 수소, 탄소포집활용(CCUS) 등이 주요 사업으로 등장하고 실제 목표와는 간극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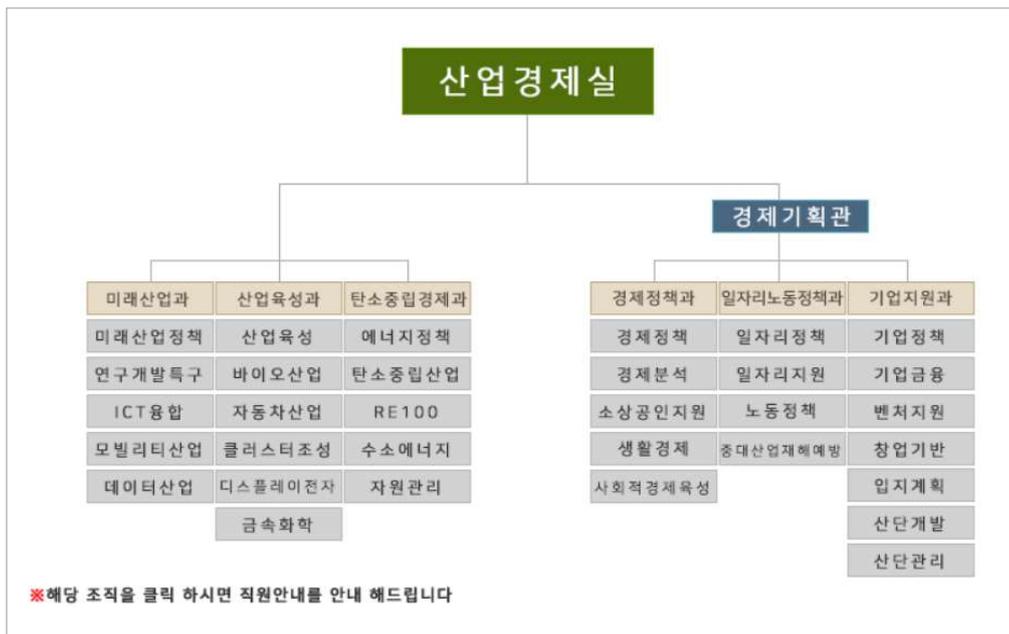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 민선 8기 일자리 종합계획

〈그림 1-1〉 충청남도 민선 8기 일자리 종합계획 비전 체계도

충청남도는 <미래로 성장하는 힘센 충남 일자리>를 비전으로 삼고, ‘일자리 26만 개 창출로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4대 전략, 11개 중점과제를 세웠다. 과제들을 대략 살펴보면 미래성장 일자리, 지역 주도 일자리, 중장년과 청년 등 대상별 일자리, 일자리 발굴과 서비스 부분으로 아래와 같은 비전 체계도를 제시하고 있다.

관계부서는 산업경제실로 미래산업과, 산업육성과, 탄소중립경제과, 경제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과, 기업지원과 6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별로 5개~7개의 팀이 배치되어 있고 경제기획관이 따로 배치되어 경제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과, 기업지원과를 지원한다. 위원회는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으로 충청남도 일자리 위원회,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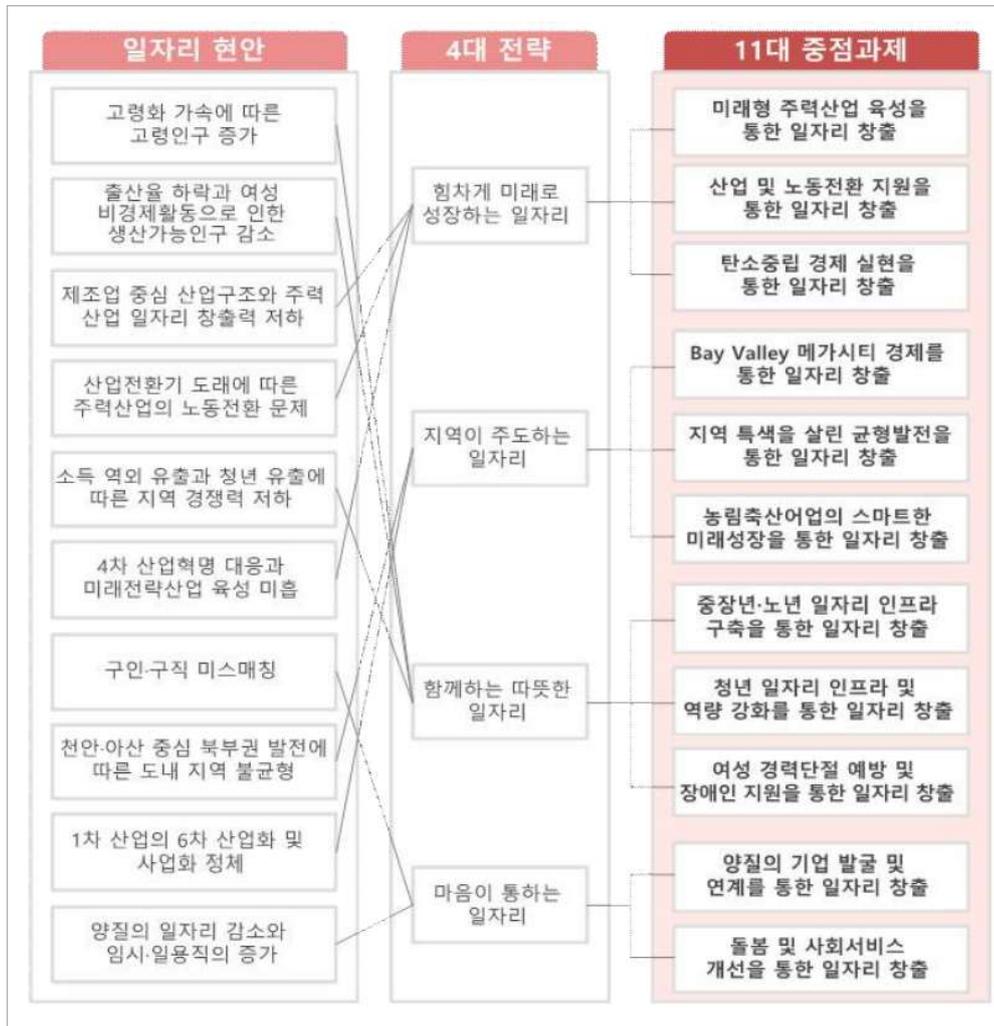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조직도 갈무리

〈그림 1-2〉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부서 체계도

## 나. 일자리 쟁점 사항

### 1)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자리와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인가?

충청남도는 일자리 현안 인식으로 산업 전환기 도래에 따른 주력산업의 노동 전환 문제, 천안과 아산 중심 북부권 발전에 따른 도내 지역 불균형, 고령인구 증가와 청년 유출, 여성 경제활동 감소 등을 꼽으며 <그림 1-3>과같이 11개 중점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자료 : 충청남도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그림 1-3〉 4대 전략 및 11대 중점과제

전체 일자리 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 부문은 인건비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고, 새로운 일자리도 문화재나 시설 관리직으로 제안되고 있어 상당수가 일용직,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되는 형태로 파악된다. 따라서 일자리의 질,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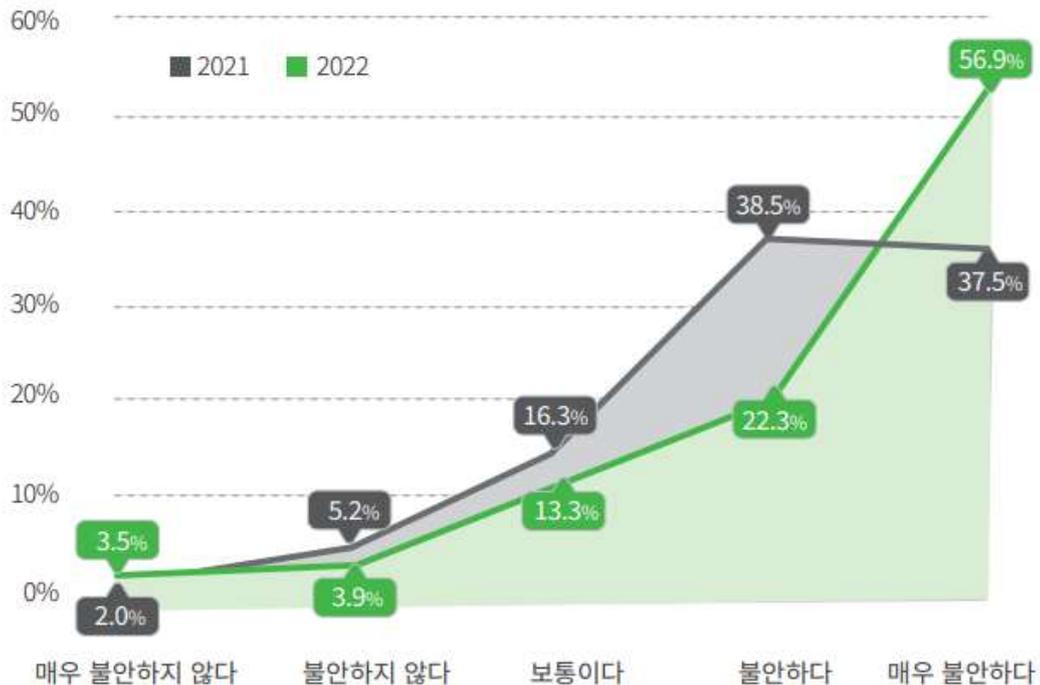
또 부서별 사업을 살펴보면 각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개별 실과가 넓은 범위로 흩어져 있다. 실제 일자리 부서가 소속된 산업경제국 외에 해양정책과, 에너지과, 도로철도항공과 등 다양한 범위이다. 정책 하드웨어 역할을 산업경제국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복지, 문화, 청년정책, 관광 분야의 정책은 해당 부서로 또다시 흩어져 있어 추진력과 성과가 떨어질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의 일자리 동력이 될 사업들을 추진할 종합적인 추진체가 필요하며 여러 부서의 사업을 짜집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서가 결집해 추진할 전략적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요구

2023년 1월 3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발전비정규노조 등 석탄화력발전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비중은 현재 44%에서 2030년 19.7%로 대량 축소되어, 석탄화력발전소 28기 폐쇄로 최소 5,300명 이상의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가 예상된다”며 “발전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하였고 ②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바탕으로 발전소 노동자 일자리 전환대책이 절실하다고 나섰다.<sup>1)</sup>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 노동자 고용 안정방안 연구결과(구준모 외, 2022)에 따르면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라 얼마나 고용불안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의에 전체 유효응답자(2,003명) 중 79.3%가 고용이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불안하다는 응답자 중에서 “매우 불안하다”는 비중은 56.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불안하지 않다”는 의견은 7.4%로 낮았다 (“매우 심각하지 않다” 3.5%). 불안하다는 인식 정도는 평점 기준으로 전체 10점 만점 중에서 8.1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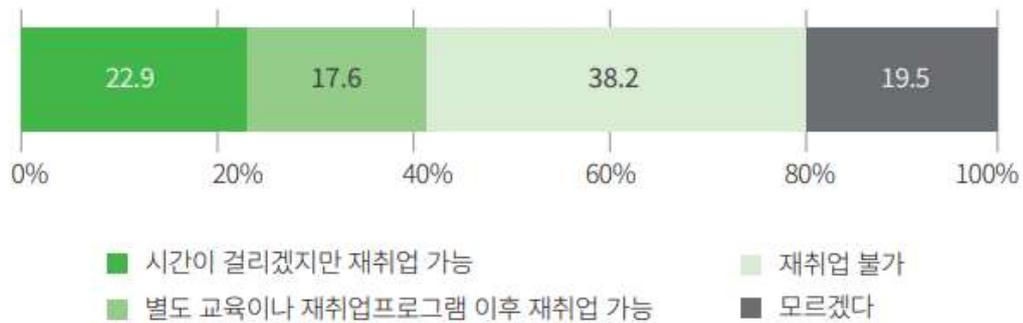


자료: 구준모 외. (2022).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방안 연구』 p.52, 그림 10

〈그림 1-4〉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 비교(2021년과 2022년 조사결과, 단위:%)

1)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7677.html>, 검색일 : 2023. 3. 11

지금 발전소가 운영 중단될 경우, 다른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다른 일자리 준비 정도에 대해 38.2%가 “재취업 불가”하다고 응답했으며, “바로 재취업 가능”하다는 의견은 1.8%에 불과하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재취업 가능”하다는 의견은 22.9%, “별도 교육이나 재취업 프로그램 이후 재취업 가능”하다는 의견은 17.6%이다.



자료: 기준모 et al. (2022).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방안 연구』 p.53, 그림 12

〈그림 1-5〉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현재 다른 일자리 준비 정도 (단위: %)

발전노동자들이 고용전환과 재취업에 대해 크게 불안해하는 현황이다. 하지만 현재 민선 8기 충청남도 일자리 계획 중 고용 안정에 대한 내용은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이나 노사민정 협력 테이블 정도로 제시되고 있어 노동자들의 요구와 현실에 맞는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충청남도과 인천, 전남, 경남 4개 시도가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한 고용 위기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을 요구하며 '화력발전 폐지지역 특별법' 추진에 나서기도 했다. 2) 충청남도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할 경우 생산유발금액 19조 2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금액 7조 8천억 원, 취업유발 인원 7천 6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법을 촉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18년 연방정부 산하에 석탄위원회를 설치해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제정, 2038년까지 4개 지역에 400억 유로(약 53조 4천억 원)를 지원한 바 있다.

### 3) 초고령사회 노인 일자리 쟁점

「충청남도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3년 충청남도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측되며 고령인구 대상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419,562명(19.8%)으로 초고령사회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2.7%p 높다. (21

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31050900063?input=1195m>, 검색일: 2023.2.29

년 기준)

이는 장래인구추계(중위) 결과보다도 평균적으로 0.9%p 정도 빠르며 '22년 현재 초고령사회에 진입('22년 9월 기준 20.4%) 했다. 전국은 '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충청남도는 이보다 2년가량 빠르다. 공주, 보령, 논산, 홍성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은 이미 고령화율 30%를 초과했다.

〈표 1-1〉 충청남도 고령인구 추계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충 남	65세 이상 인구	390	407	426	445	466	492	520
	구성비	17.9	18.7	19.5	20.4	21.3	22.4	23.6
전 국	65세 이상 인구	8,152	8,571	9,018	9,500	10,008	10,585	11,197
	구성비	15.7	16.6	17.5	18.4	19.4	20.6	21.8

자료: 충청남도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p.16, 표 3-2, 고령인구 추계 추이

또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이 14.1%에 불과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58.6%로 급속히 증가한다.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로 한정할 경우 60.2%로 증가한다.

충청남도는 노후소득 지원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 1,609억 원을 투입해, 4만 2천여 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2023년 1월 발표했다. 일자리 유형은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성격의 공익활동형 3만 4,808개 ▲지역사회 돌봄 및 공공시설 안전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4,618개 ▲소규모 매장 운영 및 전문 사업단 공동 운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장형 2,248개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업알선형 823개로 나뉘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의 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원할 계획이다.<sup>3)</sup>

3)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129010007243>, 검색일 : 2023.2.29

## 2. 녹색일자리 현황

### 가. 민선 8기 일자리 계획 중 녹색일자리 계획

충청남도 민선 8기 일자리 계획 중 녹색일자리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것은 산업 및 노동전환 지원을 통한 일자리로 제시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찾아볼 수 있었다.

〈표 1-2〉 산업 및 노동 전환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부 과제 중

9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 및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일자리 노동정책과	<p><b>〈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 치)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컨소시엄</li> <li>•(사업내용)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위기 산업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li> <li>•(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에너지 일자리 위기대응</li> <li>- 저탄소·친환경 전환기 선제대응을 위한 자동차부품기업·인력 미래경쟁력 제고</li> </ul> </li> </ul>
			<p><b>〈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내용)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협력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모델마련 및 우수 사례발굴</li> <li>- 일하는 도민의 참여플랫폼 활성화 및 사회적 대화 인프라 조성</li> <li>-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 노사민정 하부협업체 운영</li> <li>- 노사민정 공동선언 및 지역노사관계안정, 홍보콘텐츠 개발 등</li> </ul> </li> <li>•(기대효과) 지역내 중심 이슈에 대한 노사민정 등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대화 활성화를 통해 이슈의 공론화 및 협력방안 확산으로 거버넌스 강화</li> </ul>

자료 : 충청남도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p.37

이와 관련된 정부 계획으로는 석탄발전소 폐지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 폐기, 감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주요 내용은 ▲‘LNG·수소·암모니아 등 低탄소·無탄소 대체 발전소 및 신재생e 확대로 성장이 예상되는 송·배전 공사·정비 분야 등으로 최대한 재배치’, ▲‘친환경 발전으로의 전환에 따른 신규 발생 일자리를 전망하고 교육·자격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TF 운영’, ▲‘재배치·신생 업무 수행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다. 국내 석탄화력발전 폐쇄를 촉구하는 단체 ‘석탄을 넘어서’는 이와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안 도출과 관련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sup>4)</sup>

또 각기 다른 부문으로 수소 관련 계획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산업 및 노동전환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부분〉에 산업재편에 따른 대응력 강화에 따라 산업육성과가 주도하는 수소에

4) 그린포스트코리아,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83>, 검색일 : 2023. 3. 14

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 에너지과에서 주도하는 에너지 산업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표 1-3〉 산업 및 노동 전환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부 과제 중

실천과제		실과명	주요내용
순번	사업명		
10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	산업육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치) 충남 보령시</li> <li>•(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수소 생산기지 구축, 블루수소 생산·수소드론 실증 추진, 생산된 수소의 출하·유통 거점 확대</li> <li>- 석탄화력발전소의 암모니아 발전 및 수소발전 전환 추진</li> <li>- 수소산업 육성 전담기관 설치</li> </ul> </li> <li>•(기대효과) 대규모 수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li> </ul>
11	에너지 산업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에너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내용) 에너지분야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li> <li>•(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에너지 산업 분야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li> <li>- 충남 에너지 산업 국산화 기술 확보로 지재권 창출, 미래시장 선도</li> <li>- 중장기적으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li> </ul> </li> </ul>

자료 : 충청남도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p.38

한편 〈탄소중립 경제 실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부문으로 에너지과에서 계획하는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 ‘예비 수소전문기업, 폐배터리 전문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신산업으로 수소 경제를 육성한 일자리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표 1-4〉 탄소중립 경제 실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부 실천 과제별 사업내용

14	수소도시 조성 및 예비수소 전문기업 육성	에너지과	<b>〈수소도시 조성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 치) 보령시 오천주교면 일원, 당진시 송산면 송산2산단 일원</li> <li>•(사업내용)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소생태계 조기 정착</li> <li>•(기대효과) 연료전지를 통한 분산발전으로 안정적 에너지 공급, 도시환경 개선, 주민의 에너지비용 사용료 절감</li> </ul>
			<b>〈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내용) 지역특화 예비수소전문기업의 기술사업화를 통해 역량 및 기반강화로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사업화) 시제품제작, 시험평가, 인증 및 특허 지원</li> <li>- (인력양성) 취업연계</li> <li>- (컨설팅) 판로개척, 연구장비 활용</li> </ul> </li> <li>•(기대효과) 수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로 제품 고도화를 통한 핵심 기술력 확보</li> </ul>

자료: 충청남도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p.38~39

또 〈Bay Valley 메가시티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부문으로 수소에너지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 사업으로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수소 에너지 융복합 산업벨

트 조성’, ‘충남 국가 혁신 클러스터 사업’이 제시되어 있다.

〈표 1-5〉 Bay Valley 메가시티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세부실천과제 중 수소 관련 사업

실천과제		성과명	주요내용
순번	사업명		
18	수소에너지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	에너지과	<b>&lt;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gt;</b> •(사업내용) 센터구축, 신규장비 11종 12대·개선장비 2종 2대 유틸리티 5종 구축, 기업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기대효과)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 수소 산업의 고도화, 다각화 및 혁신성장 기반 구축
			<b>&lt;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gt;</b> •(위 치) 천안,아산,당진,서산시 일원 •(사업내용) · 수소특화단지 지정 추진(당진) · 수소용품 제조 수소기업 육성 및 산업벨트화(아산) · 산업단지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단지 내 수소발전소 구축 · 폐플라스틱 수소생산시설 구축 및 당진 수소도시 조성 •(기대효과) 대규모 수소인프라 구축을 통한 베이벨리 메가시티 조성 추진
		산업육성과	<b>&lt;충남 국가 혁신클러스터 사업&gt;</b> •(위 치) 내포-당진-예산-서산-아산 일대 •(사업내용) 수소 기반산업 구축을 위한 R&D 및 비R&D추진 •(기대효과) 수소전기차 핵심부품산업 역량 확대 및 수소 활용 기업군 유치 기반 마련

자료: 충청남도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41p

이 외 민선 8기 일자리 종합계획 ‘탄소중립 경제 실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폐배터리 선별과 재사용 실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국토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안건으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중 충청남도 홍성에 수소와 미래차, 2차 전지 등을 중점 육성산업으로 하는 71만 평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포함되었다. 주요하게는 수소에너지 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한 수소기반산업 육성, 수소차와 전기차 부품업체 중점 육성을 구상하고 있다.

〈표 1-6〉 국가산단 후보지 개발구상(충청권)

- (충청권) 대전, 천안, 청주, 홍성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미래차 및 부품, 철도차량 등 모빌리티 산업 육성 계획

위치	면적	중점육성산업	개발 구상
대전 (유성구)	530만㎡ (160만평)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 등 반도체 전·후방산업 지원 연계</li> <li>■ 대전 제2대덕연구단지(연구실증 및 사업화) 조성</li> </ul>
충남 천안 (성환읍)	417만㎡ (126만평)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모빌리티 소부장 밸류체인 구축</li> <li>■ 국가산단과 배후 뉴타운(벤처스타트업 기업유치) 결합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li> </ul>
충북 청주 (오송읍)	99만㎡ (30만평)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종합시험선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분원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철도산업 집적</li> <li>■ 미래철도기술개발(수소철도, 네트워크·인공지능기반 철도 운영)과 기업육성으로 세계철도시장 선도</li> </ul>
충남 홍성 (홍북읍)	236만㎡ (71만평)	수소·미래차, 2차전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에너지 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 수소기반산업 육성</li> <li>■ 수소차·전기차 부품업체 중점 육성</li> </ul>

자료: 산업통상자원부/국토부 보도참고자료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p.15

주거 관련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민선 8기 일자리 종합계획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축도시 과정에서 시행하는 노후주거지, 구도심 대상으로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 청년 창업과 혁신성장 기반 구축, 지역이 주도하는 주거복지 실현 사업을 추진한다. 추진체계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시, 군 또는 공기업(LH 등)이 시행 주체로 참여하도록 계획하고 있다.<sup>5)</sup>

민선 8기 교통 관련 일자리를 위해(키워드: 교통, 대중교통/공공교통, 버스, 자전거, 도보, 보행 등) 아산만 순환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한다. 도로철도항공과에서 주도하며 충청남도 서북부(천안, 아산, 당진)부터 경기 남부(평택)일원을 위치로 순환철도 103.7km를 건설(신설 12km, 기존 91.7km)해 아산만권 베이 벨리 조성,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 대중교통 이동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린다는 취지다.<sup>6)</sup>

농업과 관련해서는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로 농촌활력과에서 주도하는 ‘농식품 제조가공 창업경영체 자본보조 및 경상보조’, ‘제조·가공시설, 체험장, 소규모 판매장, 컨설팅 등 지원’이 있고 청년농업인이 도 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단계별 영농 정착지원 확대〉 사업이 있다. 또 도내 농창업 희망 청년농업인 영농자재 등 경상비 지원하는 〈청년 도내 농창업 지원사업〉, 〈충남형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 교육〉이 있다. 어업과 관련해 어촌산업과가 주도하고 7개 시·군(보령, 논산, 당진, 부여, 서천, 홍성, 태안)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 청년 어업인에게 어업 경영비 등 정착지원금 지원(최대 3년)하는 ‘청년 어촌 정착지원’, 해양정책과가 주도하고 연안 6개 시·군(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주요 해안가 해양쓰레기 수거

5) 충청남도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43P, 지역 특색을 살린 균형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부실천과제별 사업내용

6) 충청남도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41P, Bay Valley 메가시티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세부실천과제별 사업내용

등 관리인력을 고용·운영하는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이 있다.

민선 8기 재난, 돌봄 관련 일자리로 출산보육정책과에서 논산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남부권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사업과 돌봄이 필요한 6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 긴급, 방과 후 돌봄 등을 진행하는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운영>이 있다. 또 산불 예방 홍보, 감시, 진화 활동을 위해 산림자원과에서 추진하는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운영’ 사업을 찾아볼 수 있었다.

## 나. 녹색일자리 관련 언론 검색 결과

지역에서 녹색산업, 녹색경제, 녹색일자리로 분류돼 진행되고 있는 사업 또는 노동을 검색했지만 지역일자리로서 유효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환경일자리와 관련된 기사들은 찾아볼 수 있었지만 대개 지역이 아닌 외국 사례나 일자리 전망, 일자리 관련 지자체 정책 정도로 검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일자리와 녹색전환으로 인한 고용의 문제 등과 관련한 자료들을 아래와 같이 찾아볼 수 있었다.

### 1)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녹색일자리 전망<sup>7)</sup>

국내 석탄발전소들은 5개 지역(충남, 경남, 인천, 강원, 전남)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에서 발간한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의 고용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현 정책 시나리오 대비 탈석탄 시나리오에서 석탄과 가스 일자리 상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는데,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의 기간 동안 현 정책 시나리오에 비해 화석연료 일자리가 연간 고용인원 수 23,000명이 더 적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의 감소는 재생에너지 관련 새로운 기술로 창출되는 고용인원이 이를 상쇄한다고 분석하는데 ‘2020년과 2030년 사이에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기술 관련 건설/설치, 운영/유지보수로 새로 창출되는 연간 고용인원 수 48,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의해 크게 상쇄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탈석탄 시나리오는 경남, 인천, 강원, 전남에서도 현 정책 시나리오 대비 석탄과 가스 관련 고용을 낮게 예측하지만,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와 관련하여 창출되는 연간 고용인원 수는 화석연료 일자리 감소를 상당히 상회한다는 분석이다.

7) 기후솔루션, 「[국문]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의 고용 영향 분석」, p1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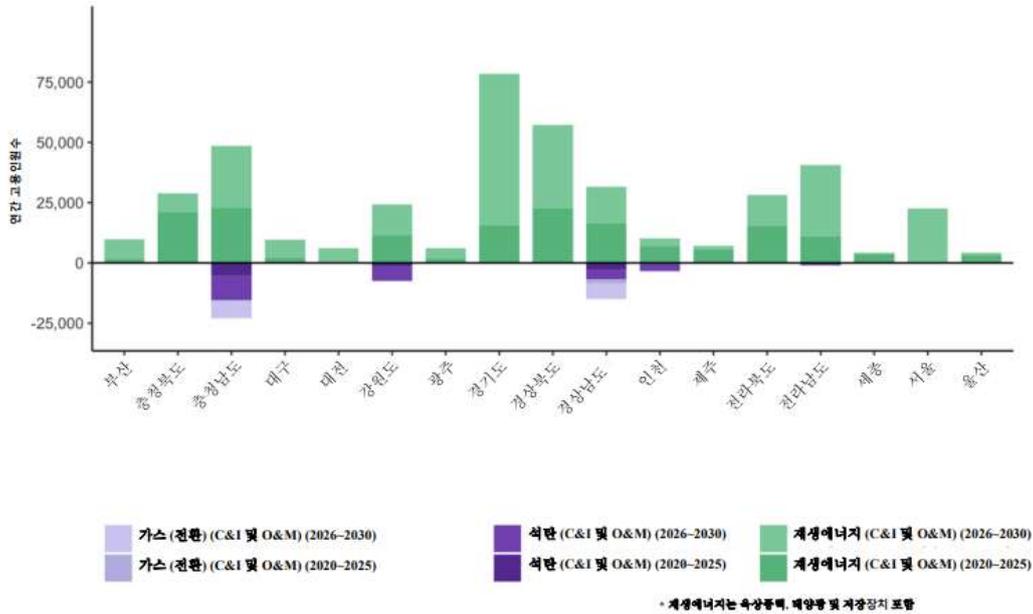


그림 74. 탈석탄 시나리오와 현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별 고용 잠재력 차이. 숫자는 범례에 표시된 기간 동안의 연간 고용인원수를 의미하며, 석탄, 가스(석탄에서 전환), 태양광, 육상풍력, 배터리 저장장치의 건설/설치와 운영/유지 보수에 해당하는, 각 지역에 배치되는 일자리 유형만 포함.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일자리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의 고용 영향 분석, 19쪽 <그림 7>

<그림 1-7> 탈석탄 vs 현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별 연간 고용인원 수 차이(C&I 및 O&M)

2) 사회적경제 부문의 녹색일자리 분류<sup>8)</sup>

수원대학교 김정인 교수가 작성한 <지역 기반 그린뉴딜과 녹색일자리 :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의 녹색일자리 업종은 아래 표와 같이 분류된다. 이 중 지역에 따른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 업종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1-7>와 같다. 모든 지역에서 청소 및 위생업종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와 충청남도 지역에서도 청소 및 위생업종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다만 이 연구는 연구 대상을 사회적 기업만으로 한정해 한계는 분명히 있음을 밝힌다.

8) 지역기반 그린뉴딜과 녹색 일자리: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김정인 수원대학교,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5권 제1호(2021. 3): 73~96

〈표 1-7〉 광역시·도에 따른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 업종별 분포 현황 (단위: 개)

지역	업종							
	청소 및 위생	조경 및 수목	천연 사업	재활용품 수집 및 활용	친환경 농축산물	환경 교육 및 컨설팅	태양광	환경 일반
서울특별시	7	3	1	0	0	0	0	0
부산광역시	6	0	0	2	0	0	0	0
대구광역시	4	0	2	0	0	0	0	0
인천광역시	4	1	1	2	0	0	0	0
광주광역시	7	0	0	0	0	0	0	1
대전광역시	3	0	0	1	0	2	0	0
울산광역시	4	1	0	0	0	0	0	0
세종특별자치시	1	0	0	0	0	0	0	0
강원도	7	1	0	2	1	1	0	0
경기도	13	2	1	4	1	2	1	1
경상북도	4	2	1	1	0	0	1	0
경상남도	2	0	0	1	0	0	1	0
전라북도	5	1	0	0	0	0	0	0
전라남도	2	2	1	0	1	0	0	1
충청남도	8	0	0	2	1	1	0	0
제주특별자치도	2	0	0	2	0	0	0	0

자료: 한국공공관리학보, 〈지역기반 그린뉴딜과 녹색 일자리: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p.89

이와 관련한 민선 8기 일자리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지원은 인건비 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충청남도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등의 지원조직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1,262개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존재한다. 녹색일자리 확대에 의지가 있다면 녹색일자리 관련 업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영역과 접목해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환경 분야 관련 사회적경제를 발굴, 육성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사회적 경제가 그린 뉴딜과 만날 수 있는 영역은 에너지, 건물, 교통, 폐기물,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교육, 재난 대비, 돌봄, 건강과 의료, 예술과 놀이, 먹거리 등 다양하다”며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일이면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에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9)

9) 참여연대 월간복지동향, 그린 뉴딜, 기후위기 시대 생존 전략을 짜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30777>, 검색일 : 2023.3.14.

### 3. 녹색일자리 사례 및 쟁점 사항

충청남도의 녹색일자리는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 보장과 신산업 위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두 가지 이슈가 크게 드러난다. 다만 신산업 관련 기반, 인프라 조성에 일자리 계획들이 집중되어 있어 당장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는 것, 기존 일자리 전환은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큰 한계로 보인다. 본 내용에서는 신산업 기반 창출 외에도 도민들의 생활과 연계되는 부분을 녹색일자리로 판단해 몇 가지 쟁점과 사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 1) 충남 천안 스마트 그린 산단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천안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단’을 출범했다. 향후 5년간 국비 2,669억 원 규모를 지원해 충남 천안 스마트그린산단 협력을 추진키로 했고, ‘천안 2, 3, 4산업단지 스마트·친환경·사람중심·재난 제로(ZERO) 미래형 산단 조성’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제조공정 혁신, 에너지 효율 증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사업 중 ‘스마트 제조 고급인력 양성(2023~2024, 1차 년도)’ 계획을 살펴보면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부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부품 제조혁신을 선도할 고급인재 및 실무 기능인력을 육성하고 기업-대학 간 협력 기반한 연구역량 강화, 인재 양성 시스템을 통해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친환경 미래차 전문인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향후 추진 방향으로 지역 내 친환경 자동차 부품 연구인력 육성과 기업 기반 실무형, 산학연계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며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히고 있다.<sup>10)</sup>

#### 2) 충청남도 적정기술공유센터 사례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은 최소한의 자원을 소비하는 생태적인 기술로 ‘인간의 열굴을 한 기술’로 불린다. 중간기술, 생활기술, 전환기술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속 불가능한 산업사회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된 기술이다.

충청남도 적정기술 관련 단체 10개의 연합체인 ‘충남 적정기술 협동조합 연합회’가 운영하는 센터는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부지 내 위치하고 있다. 충청남도가 적정기술 보급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환경부 공모로 2017년 1월 설립했다. 공유센터는 교육, 워크샵, 전시체형 등 적정기술 보급과 마을 공동체 적정기술 사업 개발, 적정기술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역할을 하고 있다.<sup>11)</sup>

10)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남천안스카트그린산단사업단(2023.02), 충남천안 스마트 그린산단 추진현황 10p, (<https://libinfo.smu.ac.kr/flexer/index.jsp?ftype=hwp&attachNo=520205>) 검색일 : 2023.4.5

적정기술공유센터는 농기구를 비롯해 생태건축, 난로, 목공, 업사이클링, 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 적정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농업이 기계화, 대량화되면서 이를 위한 농업 정책이 확대되었지만, 소농을 위한 정책, 지원은 오히려 줄고 있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농민의 건강, 작업 효율을 고려한 농업 기술 개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생분해되는 종이 육묘 포트 개발, 계절별 풀 맞춤형 제초기 3종 세트, 두둑 만들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올인원 제초기, 서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모종 이식기,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파워 쟁기 등 농기구를 개발했다.<sup>12)</sup>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지자체에서는 첫 번째로 도민에게 적정기술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정 및 시·군에 부문별 정책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 적정기술지원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

### 3) 충남 홍성군 행복농장 협동조합 사례<sup>13)</sup>

사회적 농업은 농업을 통해 농촌에 잠재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농촌지역에 복지, 교육, 고용 부문 등에서 농업을 활용하는 활동이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충남지역 농가인구는 감소세가 뚜렷해 2017년 28만 8,800여 명에서 최근인 2021년 25만 2,078명으로 5년 새 약 3만 6,000명이 감소했다. 65세 이상 농촌인구 고령화 비율도 51.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돌봄 문제가 빠르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sup>14)</sup>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농업과 지역 돌봄을 결합한 충남 홍성군의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장곡함께돌봄센터는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협동조합 행복농장을 시작으로 한다. 행복농장은 정신질환 장애인과 발달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교육과 돌봄활동을 통해 직업 재활훈련, 진로 탐색을 제공하고 있다. 이사장 포함 5명의 조합원과 농장운영팀 스텝 2명, 거점농장팀 3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홍성유기농영농조합 소속으로 친환경입산물꾸러미, 허브와 꽃 등을 유통한다. 행복농장은 2014년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자연에서 답을 구하다’는 자연구시의 기본 과정을 시작했다. 자연구시는 만성정신질환자 대상 농업, 교육 재활프로그램으로 <돌보는 농부학교>와 장곡초등학교 특수교육 아동 대상 <꼬마 농부학교> 비롯 청소년/청년 사회적농업 실습 교육과 마을돌봄모임, 돌봄농업을 공부하는 함께돌봄공부 등을 진행하고 있다.

행복농장은 장곡면 주민자치회 복지돌봄분과, 함께하는장곡 사회적협동조합에 참여하며 장곡면 지역사회통합돌봄 구성과 지역 노인복지사업 계획에 함께했고, 2021년 장곡면 주민참여 돌봄 조사를 진행하며 돌봄망 구축에 나서게 된다.

농촌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던 함께 돌봄 역할을 되찾고, 지역사회가 돌봄의 역할을 ‘인소싱’ 한다는 구상으로 지역 돌봄역량 강화, 공공 공간의 재건, 주민참여 확대와 지역 단체 간의 연대 목적으로 사회적 농업 기반 지역복지실천 모델인 장곡함께돌봄센터 건립을 제안하고 추진 중이다.

11) 농촌진흥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rda2448/222379060456> 검색일 : 2023. 4. 5

12) 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2018.04), 2017 충남 시민사회사 <지역을 살리는 스무가지 실험> 51쪽~53쪽

13)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2022.7.9.),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사회적농업 성과공유회 자료집

14)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038>, 검색일 : 2023. 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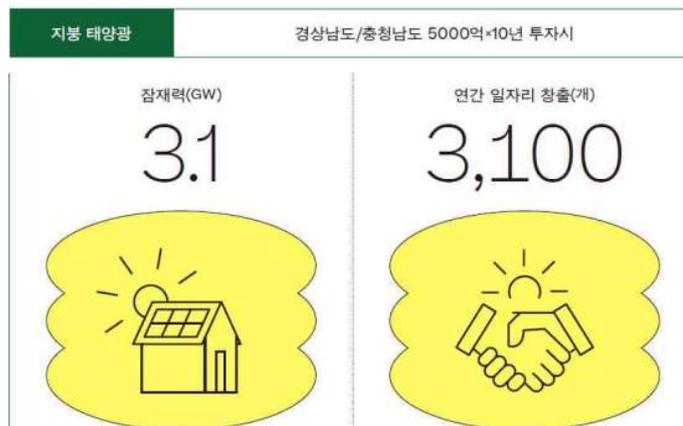


자료: 행복농장 홈페이지 갈무리 <http://happyhada.com/>

〈그림 1-8〉 행복농장 협동조합의 사회적농업 활동 중 ‘돌봄과 교육’

#### 4) 지붕 태양광 잠재량으로 본 녹색일자리<sup>15)</sup> 쟁점사항

녹색전환연구소(2023)의 <탈석탄화 지역의 녹색일자리 창출방안 기초연구>에 따르면 10kW 이상 설치될 수 있는 건물, 산업단지 지붕 잠재 용량이 충청남도가 4번째로 많은 3.1기가와트 정도로 평가되었다. 소규모 지붕 태양광 1GW당 1.6조 원(kW당 단가를 대략 160만 원으로 산정)으로 추산하면, 충청남도와 경상남도에 각각 5조 원을 투자하여 연간 3.7TWh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매년 5천억 원씩 10년 동안 투자할 경우, 연간 직간접일자리(유도된 일자리 제외)를 3,100개(10억 원 당 취업유발계수 6.2 적용)를 창출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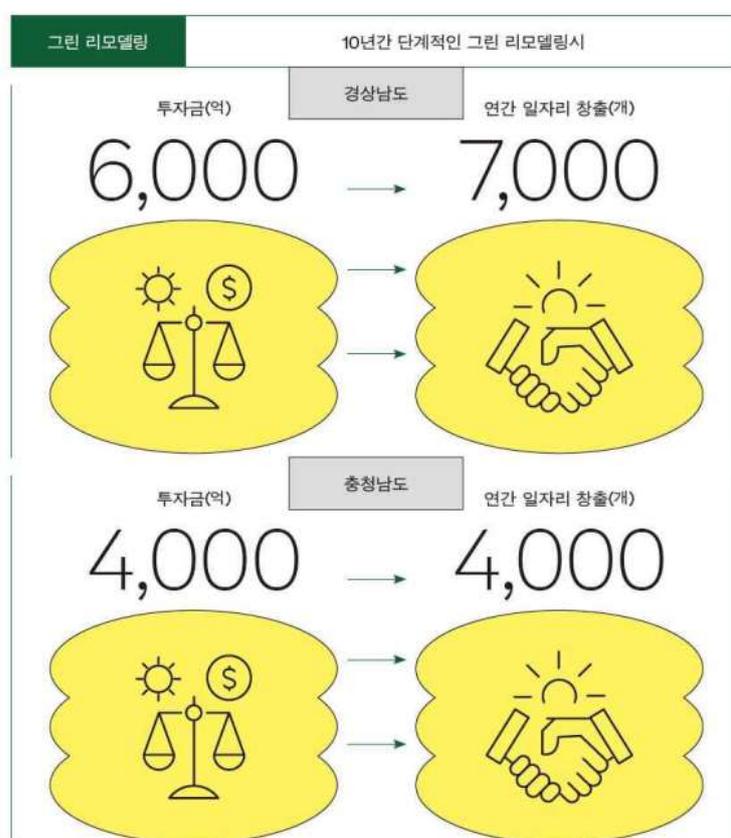
자료 : 녹색전환연구소(2023), <탈석탄화 지역의 녹색일자리 창출방안 기초연구> p.53

〈그림 1-9〉 충청남도와 경상남도의 지붕 태양광 신설 후 10년 투자 시 효과

15) 녹색전환연구소(2023), <탈석탄화 지역의 녹색일자리 창출방안 기초연구>, p.112

## 5) 주택 단열 그린리모델링에 의한 녹색일자리<sup>16)</sup> 쟁점사항

녹색전환연구소(2023)의 <탈석탄화 지역의 녹색일자리 창출방안 기초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을 높여 기후위기 혹은, 혹서 기후에 대처할 단열 그린리모델링 대상 주택으로, 2000년 이전 지어진 단독주택을 가정하면 충청남도가 약 20만 채에 이른다고 기술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단열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충청남도는 약 4천억 원(2만 채, 단독주택 1채당 평균 2천만 원 추산)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충청남도는 직간접 일자리 4,600개를 창출(10억 원 당 취업유발계수 11.6을 적용)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자료 : 녹색전환연구소(2023), <탈석탄화 지역의 녹색일자리 창출방안 기초연구>, 54p

<그림 1-10> 충청남도와 경상남도의 단열 집수리 프로젝트 10년 단계적 그린리모델링 시 효과

16) 녹색전환연구소, <탈석탄화 지역의 녹색일자리 창출방안 기초연구>, 113p

## 02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 1. 에너지전환 현황

#### 가. 갈등 사례

##### 1)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사례

###### ○ 서산 천수만 간척지(A 지구) 태양광 발전 갈등

A 업체가 부석면 강당리 1400번지 등 27필지(37만 1,850㎡)에 40MW 규모의 대형 태양광 발전소를 14개로 분산해 충청남도에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져 부석면 태양광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송영철)가 출범, 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우량 농지의 마지막 보루인 천수만 간척지(A지구)에 태양광 발전 설치는 불가하다며 수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서산시에 진정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수 회에 걸쳐 농지 쪼개기 방식 등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치를 시도하고 있다.

###### ○ 서천군 부사호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갈등

부사호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서천군 서면과 보령시 웅천읍 일대 부사호 352ha 중 만수 면적의 20%에 달하는 70ha에 90MW급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3만 2,000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KS 이엔에스와 EPC17)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지난해 11월 자율 공시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SK이엔에스는 협약에 따라 1,305억 원을 투입해 향후 3년간 서천군 부사호에 90MW 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한 뒤 20년간 발전사업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부사호 수상 태양광 반대 대책위원회는 ▲부사호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설 허가 신청 철회 ▲부사호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농어촌공사의 주민 갈라치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부사호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고 수자원관리법에 따라 낚시 및 입어 금지를 통해 생태계가 점차 복원되어 가고 있어 수상 태양광 설치로 서식지 파괴 등을 우려하고 있다.

17)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

### ○ 보령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갈등

보령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은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 위기 대응 전략으로 오는 2025년까지 약 6조 원을 투자해 외연도 북측, 황도 남측 해상 62.8km<sup>2</sup> 면적에 1GW급 해상 풍력 발전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보령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최대 국비 36억 원을 확보하여 기초설계, 풍향·해양환경 조사 등 개발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보령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사업의 추진을 놓고 어업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이 발생해 2020년 사업 착수단계부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발족해 협의를 진행하고, 보령 에너지전환 1호 사업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 ○ 태안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갈등

태안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은 태안군 내 노후화력 발전단지 폐쇄 대비를 목적으로 총 5개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해 1.76GW를 발전할 계획으로 세워졌다. 태안 소원면 모항항 및 만리포 전면 해상(만리포 25km 전방)에 5개의 풍력단지(총 1.76GW 규모)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조 3천억 원이 민간 자본으로 투입된다. 지난 2018년 한국남동발전·두산중공업·태안풍력발전과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으며, 2022년 ‘태안’ 해상풍력을 시작으로 착공에 돌입해 오는 2027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하지만 태안 해상풍력 반대투쟁위원회 등 풍력발전 설치를 반대하는 어민들은 어장 생태계 교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회유성 어종 감소 등을 우려하며 지금까지 반대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 2) 발전소 운영 및 폐쇄에 관한 갈등 사례

### ○ 전국 광역지자체 중 총 대기오염 물질 배출 물질 배출량 전국 1위

전국 지자체 중 1차 에너지 공급량 1위로 전국 59기 중 29기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전국 화력발전 설비 용량 35,350.66MW의 51.6%인 18,228.06MW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당진시에 현대제철 등 대규모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이 밀집해 있어 충청남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총 대기오염 물질 배출 물질 배출량 전국 1위를 차지했다.

###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요구 18)

2023년 1월 3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발전비정규노조 등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비중은 현재 44%에서 2030년 19.7%로 대량 축소되며, 석탄화력발전소 28기 폐쇄로 최소 5300명 이상의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가 예상된다”며 “발전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고, ②공공 중심의 정

18)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7677.html>, 검색일 : 2023.3.20

의로운 에너지전환을 바탕으로 발전소 노동자 일자리 전환대책이 절실하다고 나섰다.

## 나. 주요 정책

### ○ 수소 편중 에너지전환 정책

충청남도 에너지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따르면 2023년 지역산업 진흥 및 고도화 정책의 에너지신산업 육성 단위로 총 23,606,005원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사업은 그린 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한 출연금 83억, 수소 도시 조성사업 260억 (균형발전 200억, 도비 60억),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52억 1,400만원(국비 46억 2천만, 도비 5억 9,400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충청남도 지역에너지 계획에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385억 원을 투자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1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약 530억 원을 투자하는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등 12개 과제가 수립되어 있다.

〈표 2-1〉 충청남도 지역에너지 관련 사업비

구분	사업명	단기(백만원)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 에너지 공급대책								
	해당없음							
2. 신재생에너지 보급대책 (12개 과제)								
2-1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6,423	6,423	6,423	6,423	6,423	6,423	38,538
2-2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	-	-	36	32	3,032	3,100
2-3	신재생 보급확대를 위한 한전 계통선 보강		0	0	0	0	0	0
2-4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확대사업	-	-	20	20	20	200	260
2-5	재생에너지 자원조사 및 계획입지 도입 추진		100					100
2-6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지원 및 확대		320	320	320	320	320	1,600
2-7	RE100산단 추진							
2-8	수소연료전지 발전		-	-	-	-	-	
2-9	바이오가스 이용 수소생산 및 충전소	200	200	200				600
2-10	버스연계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562	563					1,125
2-11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4,300	6,800	8,630	10,350	11,150	11,850	53,080
2-12	도시형, 농촌형, 어촌형 등 주민참여형 특화사업			400	400	400		1,200

자료: 충청남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최종보고서, p.306

다만 지역에너지계획에서 수립한 에너지전환 관련 다양한 사업이 이를 추진해야 할 민선 8기 에너지과 예산에 수소 충전소 확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2040년 비전인 재생에너지 40% 달성이 불투명해 보인다. 시군별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예산들을 찾아보니 일반 지원사업(예 : 주택용 태양광 설비 지원)을 제외하고 보령시와 태안이 해상풍력 관련 예산을, 서산시가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20개소), 태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종합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10억 원을 수립한 것이 눈에 띄었다.

### ○ 충청남도 에너지전환 인적자원들

충청남도 에너지 관련 센터, 협동조합 등 인적자원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2〉 에너지전환을 위한 충청남도의 인적 자원

에너지전환을 위한 충청남도의 인적 자원	
에너지지원센터	충청남도 에너지센터 보령에너지센터 당진에너지센터
협동조합	에너지협동조합 2050함께(천안) 아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천에너지협동조합 당진시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보령햇빛발전협동조합 산림살림에너지협동조합(홍성) 보령사회적협동조합 지구로운 해바람에너지협동조합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
재단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자료: 편집자 작성

### ○ 충청남도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 19)

2021년 공주 정안면 어물리에 있는 마을 공동 창고에 30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됐다. 발전시설 설치에는 주민 70가구 132명이 참여했으며, 투입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도와 시군비 40%, 자부담 60%가 투입되었다. 연간 약 3만 9,420kWh의 전력 생산을 전망하며 수익금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이나 마을 복지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2022년 약 4억 원의 사업비로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를 공주, 당진, 서천 등에 7개 마을을 선정해 설치했다.

## 2. 주거와 이동

### 가. 주거 관련 지역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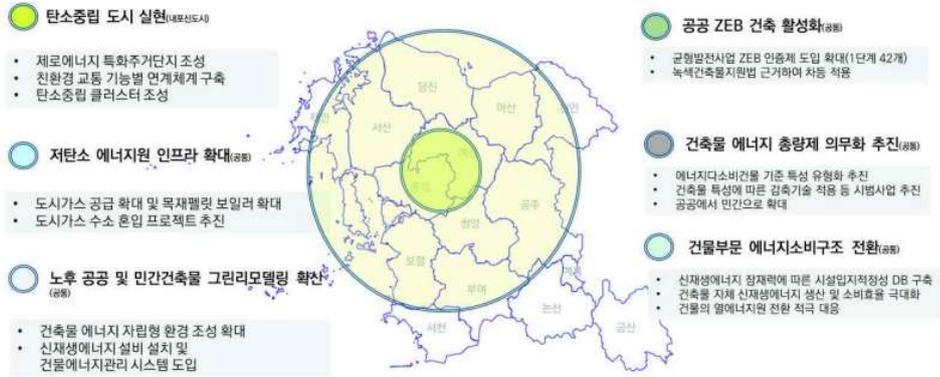
#### 1) 노후건축물 개선을 위한 예산 마련 시급<sup>20)</sup>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건물 부문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건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수요관리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제로 에너지, 충남 맞춤형 건물 온실가스 관리를 목표로 한다. 단기(2032년까지)적으로는 고효율 기기, 그린리모델링 확산과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건물 부

19) 인터스트리 뉴스,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83>, 검색일 : 4월 8일

20) 충청남도(2022.12),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초안) p.175, pp.240~243

분 온실가스 총량 관리기반 마련을 추진 방향으로 한다. 중·장기(2045년까지)로는 제로에너지도시 구축, 건물 온실가스 총량 관리 의무화, 건물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전력화)을 추진방향으로 한다.



자료 :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그림 2-1〉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건물 부문 시군별 중점 추진 사업

건물 부문의 세부 계획 중 수송과 탄소흡수원 부문에 연계한 15분 도시 시범사업을 내포신도시 등에서 추진하고 점차 확대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이외에도 저탄소 에너지원 인프라 확대, 노후 공공 및 민간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확산, 건물 부문 에너지소비구조 전환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초안)에 따르면 충청남도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약 20만 호로 집계되는데 천안시가 26,357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여군이 21,399개, 논산시가 21,308개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초안)(2022.12), 240p, 그림 5-12

〈그림 2-2〉 충청남도의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현황 지도

충청남도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취약계층 이용 대상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고성능 창호, 단열재, 폐열회수환기장치 설치 등을 추진해왔고 2020년 기준 시군별 보건소, 의료원, 어린이집 대상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82개를 추진했다.

〈표 2-3〉 충청남도의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상황(2020년 기준,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합계	82	12	10	6	17	6	3	0	4	4	5	7	3	4	0	1
보건소	64	10	7	4	17	6	3	0	4	2	4	6	2	3	0	1
의료원	2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어린이집	11	1	3	2	0	0	0	0	0	2	1	1	0	1	0	0

자료: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초안)(2022.12), 243p, 그림 5-22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주로 공공건물 위주로 그린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어 실제 건물 효율 개선이나 에너지전환이 필요한 주택, 건물들은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남도는 전체 노후건축물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별 효율 개선이 가능한 건물과 주택의 실질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도별 목표를 세워 그에 맞게 과감한 예산투자를 해야 한다.

## 2) 충청남도의회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특별위원회’ 구성<sup>21)</sup>

충청남도의회는 2023년 4월 6일,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인철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특위는 공동주택 내 녹지공간의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 3) 서천군 송림마을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sup>22)</sup>

충남 서천군 송림마을은 구 장항제련소 관련 토양오염지역에 편입된 주민들이 집단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2013년 농식품부의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이하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마을의 노후·불량 주택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이 마을에 설립된 공동생활홈 거주자는 마을의 독거노인, 영세민 중에서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며 건물의 관리는 마을에서 담당하되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과금과 개인의 식사 등은 입주자 개인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마을회 및 부녀회의 봉사활동을 통해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21) 아파트관리신문,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70>, 검색일 : 2023.4.5

22) 충남연구원(2022.12), 「충남 농촌주거공간개선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례조사 및 정책 제언」, pp.34~36.

#### 4) 충청남도 기후변화 안심마을 사업

충청남도는 서부발전과 2020년 ‘탄소중립 실현 및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기후위기 안심 마을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2020년 서천군과 천안시 18개 마을에 조명과 보일러 교체, 2021년 공주시 우성면, 계룡시 두마면과 금암동, 청양군 정산면 등 39개 마을을 최종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다.<sup>23)</sup> 2014년 2월 충남 논산시 채운면에서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 회원들이 뱃짚을 압축한 단열재와 황토로 생태단열사업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sup>24)</sup>

#### 나. 이동 관련 지역 현안

충청남도민들의 대중교통 만족도를 보면 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가 기차(지하철 제외), 시외/고속버스 등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교통 문제가 지역 정주 여건을 어렵게 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자료: 충청남도, 2022 충남 사회지표 보고서(2022.12) p.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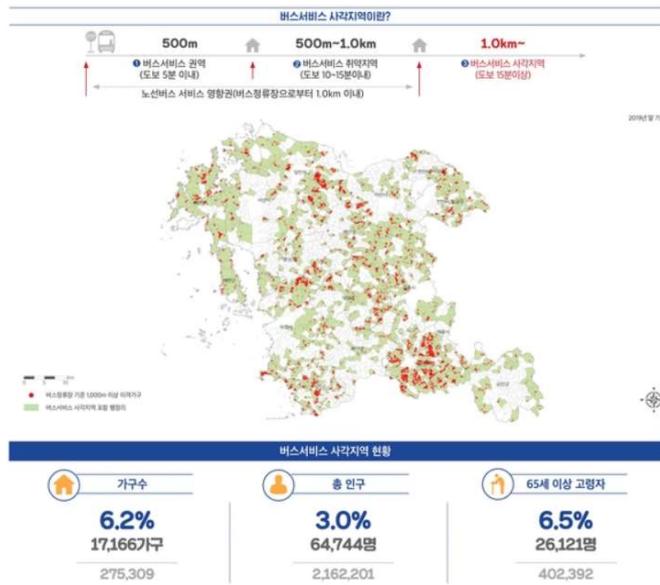
〈그림 2-4〉 충청남도민 대중교통 이용만족도(단위 : %, 점)

충남 수요응답 공공형버스 통합 운영방안에 따르면 충청남도 버스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가구

23) 브레이크뉴스, <https://www.breaknews.com/777341>, 검색일 : 2023.4.8

24)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RINT/667905.html>, 검색일 : 2023.4.8

수는 총 6.2%인 17,166가구, 인구로는 3.0%인 64,744명, 65세 이상 고령자는 26,121명으로 나타났다. 25)



자료: 충청연구원 충청 정책지도 통권 29호(2022-02), 「충남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현황과 해결방안」 2p

〈그림 2-5〉 충청남도 버스서비스 사각 지역 현황

충청남도는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공공형 버스를 시군별로 운영 중이다. 충청연구원이 작성한 「충남 수요응답 공공형버스 통합 운영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형 버스 사업취지에 맞게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별 공공형 버스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되도록 대중교통 사각지역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고, 15개 시·군의 대중교통 사각지역 제로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와 연차별 목표 설정과, 연차별 목표 달성을 위한 ‘충남 대중교통 사각지역 관리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26)

25) 충청연구원, 충청 정책지도 통권 29호(2022-02), 「충남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현황과 해결방안」 p2.

26) 충청연구원(2022.02), 「충남 수요응답 공공형버스 통합 운영방안」 p.92~93

## 참고문헌

### [국내문헌]

구준모, 전주희, 이재훈, 임용현(2022).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방안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2022-09), pp.51~53

기후솔루션(2021), 「[국문]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의 고용 영향 분석」, pp17~19.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2023), p15, 국가산단 후보지(충청권) 김정은 수원대학교, 「지역기반 그린뉴딜과 녹색 일자리: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5권 제1호(2021. 3) pp.73~96.

녹색전환연구소(2023) 「탈석탄화 지역의 녹색일자리 창출방안 기초연구」 pp.112~113.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2022.7.9.),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사회적농업 성과공유회 자료집」 pp.29~56.

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2018.04), 2017 충남 시민사회사 「지역을 살리는 스무가지 실험」 pp.48~55.

충청남도, 2022 충남 사회지표 보고서(2022.12), p.220

충남연구원(2022.02), 「충남 수요응답 공공형버스 통합 운영방안」 pp.92~93

충남연구원 충남 정책지도 통권 29호(2022-02), 「충남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현황과 해결방안」 p2.

충남연구원(2022.12), 「충남 농촌주거공간개선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례조사 및 정책 제언」 pp.34~36.

충청남도(2023~2026), 「충청남도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pp.16~33

충청남도(2022.12),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초안)」 p175, pp.240~243.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남천안스카트그린산단사업단(2023.02), 「충남천안 스마트 그린산단 추진현황」 p.10

### [온라인 자료]

그린포스트코리아, 탈석탄 흐름 속 새롭게 제기되는 '일자리' 관련 문제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83>, 검색일 : 2023. 3. 14

농촌진흥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rda2448/222379060456> 검색일 : 2023. 4.5

브레이크뉴스, 충청남도,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완료 <https://www.breaknews.com/777341>, 검색일 : 2023.4.8.

아파트관리신문, 충청남도, “공동주택 내 녹지공간을 도시의 중요 공공인프라로 관리할 것”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70>, 검색일 : 2023.4.5

연합뉴스, '화력발전 폐지지역 특별법' 추진...충남 등 4개 시도 협력 나서 <https://www.yna.co.kr/view/AKR202301310509000063?input=1195m>, 검색일 : 2023.2.29.

인더스트리 뉴스, 충청남도, 첫 주민수익형 마을 태양광발전소 본격 가동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83>, 검색일 : 2023.4.8.

중도일보, 충남,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 대폭 확대 3163개 늘려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129010007243>, 검색일 : 2023.2.29

참여연대 월간복지동향, 그린 뉴딜, 기후위기 시대 생존 전략을 짜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730777>, 검색일 : 2023.3.14.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038>, 검색일 : 2023.5.16

한겨레, 기름보일러보다 벗짚...‘없는 사람’ 보듬는 ‘적정 기술’ <https://www.hani.co.kr/arti/PRINT/667905.html>, 검색일 : 2023.4.8.

한겨레, 석탄화력발전노동자 “장차 5300명 해고...일자리 전환 대책 필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7677.html>, 검색일 : 2023.3.20.